



우크라이나
전쟁
4~5면

프랑스
대선 결과
2~3면

일본인·한국인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사도광산과 일본 제국주의
8~10면

미국 LA 흑인 항쟁 30주년
인종차별이 촉발한
정당한 분노의 표현
12~13면

윤석열의 '노동개혁'
임금 삭감, 규제 완화 등
노동조건 후퇴 15, 16면



프랑스 대선

마크롱이 이겼어도

나치의 위협은 증대하고 있다



르펜은 2017년보다
더 강력해졌다

관련 기사 2~3면

프랑스 대선

마크롱이 이겼어도 나치의 위협은 증대하고 있다

르펜은 2017년보다 더 강력해졌다

찰리 김버

4월 24일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에서 신자유주의자 에마뉼 마크롱이 파시스트 마린 르펜을 58퍼센트 대 42퍼센트로 꺾고 당선했다. TV 뉴스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1분 만에 거리 시위가 시작됐다. “르펜이 싫어서 시위에 나왔어요. 하지만 마크롱이 앞으로 5년 동안 공격을 벌이리라는 것도 알아요.” 파리 거리 시위에 참가한 학생 파트리스가〈소셜리스트 워커〉에 한 말이다.

마크롱은 파시즘의 전진에 맞선 방벽이 아니다. 파시스트 정당 국민전선(지금의 국민연합)의 결선 진출은 지난 20년 사이 세 번째인데, 이번이 그 어느 때보다 승리에 근접했다.

대선 1차투표에서 [국민연합]의 득표율이 어떻게 올랐는지 보자. 이들은 1974년에 0.75퍼센트, 1995년에 15퍼센트, 2012년에 18퍼센트, 2017년에 21퍼센트를 득표했는데, 올해는 23퍼센트 이상을 득표했다. 하지만 상황이 나쁜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슬람을 혐오하는 역겨운 극우 에릭 제무르도 1차 투표에서 7퍼센트를 득표했다. 그리고 또 다른 극우 후보까지 합치면 극우·파시스트 후보들은 도합 32퍼센트 넘게 득표했다.

신자유주의

르펜은 자신이 평범한 사람들 편이고 생활비 급등 우려에 공감한다고 말하며 표를 얻었다. 그러나 르펜이 선거 후 ‘파빌리옹 드 아르므농빌’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국민연합의 진정한 청중이 누구인지 드러났다. ‘파빌리옹 드 아르므농빌’은 매우 부유한 동네인 파리 제16구(區)에 있는 불로뉴 숲 내 행사장이다.

4월 24일 투표에서 파시스트가 많은 표를 얻은 것은 일차적으로 마크롱의 정책들 탓이 크다. 지난 5년 동안 노동계급을 혹독하게 공격했던 정책 말이다. 신자유주의에 도전한 ‘노란 조끼’ 운동을 야만적으로 탄압하는 일이 지난 5년 동안 계속됐다. 시위 진압 경찰의 폭력으로 시위 참가자들의 손이 절단되고 안구가 적출됐다. 마크롱 정부하에서 경찰은 난민들의 천막을 찢어발겼고, 국가는 억압적 법률을 무더기로 제정했으며, 무슬림을 거듭 공격했다. 마크롱 정부의 내무장관 제랄드 다르마넝은, 르펜이 이슬



파시스트 마린 르펜이 프랑스 대선에서 낙선했지만, 르펜의 득표는 늘었다

람에 “무르다”고 비난했다.

마크롱을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다. 마크롱은 등록 유권자 중 38퍼센트의 표를 얻어 당선했는데, 5년 전에는 44퍼센트를 득표했었다. 이번 마크롱의 득표는 1969년 대선 당시 조르주 포피두의 득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언론들이 선거 초기부터 기권율이 지난 반세기 넘는 기간을 통틀어 가장 높으리라고 보도했던 이유는 진정한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수십 년에 걸친 과정이 축적된 것이다. 애초에 [프랑스] 파시스트들의 지지 기반은 작았는데, 대부분 알제리 식민 전쟁을 지지한 전직 군인들이었다. 그중 다수는 1960년대에 알제리와 프랑스에서 수백 건의 테러와 수천 건의 살인을 저지른 단체 ‘군사비밀조직(OAS)’의 조직원들이었다.

인종차별

파시스트들의 성장에는 전통적 지배계급이 평범한 사람들을 공격한 데 따른 환멸이 일부 작용했다. 그러나 결정적 요인은 “중도” 정치 세력들(과 좌파들 대부분)이 이슬람 혐오, 반(反)로마인·반(反)이민 정책, 권위주의를 수용한 것이었다.

국민전선(FN)을 창당한 마린 르펜의 아버지 장-마리 르펜은 추종자들에게, 자신이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스스로 권력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었다. 장-마리 르펜은 프랑스인들이 “복사본보다 원본을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에 프랑스 의회는 우파와 사

회당의 지지 덕에 학교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심지어 극좌파 일부도 무슬림의 관습이 “공화국”, 세속주의, 여성의 권리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주류 보수 후보인 발레리 페크레스는 제무르가 내세운 극우 음모론 “대전환”[유럽 백인들이 이민자들로 대체되고 있다는 주장]을 따라했다.

주류 정당들 또한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공격했다. 위기 때문에 실업과 불확실성이 커진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파시스트들의 정책을 법적으로 정당화해 주면서, 파시스트들이 득을 보는 상황인 절망과 환멸을 부추겼다.

좌파는 투쟁해야 한다

파시스트 부상의 이면에는 좌파의 실패가 있다. 명백한 실수 하나는, 장-마리 르펜과 후임자 마린 르펜을 나치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또 다른 우익 정당일 뿐”이라고 본 것이다.

[만약 나치라고 규정했다면] 모든 노동계급 조직이 단결해 파시스트에 맞서 선전·조직하고, 파시스트들의 집회를 해산시키고, 거리에서 파시즘에 맞서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편, 영국 우파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새로운 프랑스 혁명”이라는 헤드라인과 두 면짜리 특집 기사를 실어 르펜이 2017년 대선에서 거둔 성공을 축하했다.

파시스트들은 다른 방식으로 전진하고 있다. 전통적인 파시스트 전략에는 ‘거리의 군대’가 필요하다. 이 ‘거리의 군대’는 처음에는 정규군과 구별되는 집단으로, 좌파를 분쇄하고 유대인·무슬림·이민자 같은 희생양을 괴롭히고 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르펜에게는 그런 집단이 없지만, 그런 것이 성장할 잠재력이 훤히 보인다.

극우 단체 ‘제네라시옹 Z’(제무르 지지 단체)는 좌파, 성소수자, 인종차별 반대 운동가들을 공격했다. 지난주에 극우 지지자들은 좌파 학생들의 점거를 침탈했다.

국가 기구에도 파시스트 지지자들이 득시글거리고 있다. 2021년에 한 무리의 퇴역 장성들은 이른바 “조국을 타격하는 붕괴”에 맞서는 쿠데타를 위협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찰 중 42퍼센트가 제무르에게 투표했고, 60퍼센트가 파시스트·극우 후보들에게 투표했다.

앞으로 5년 동안 마크롱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고, 복지 혜택을 공격하고, 무슬림을 표적으로 삼고, 노동계급 조직을 탄압할 것이다. 파시스트들은 여기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 위험성은 뚜렷하다.

그러나 더 광범한 정치적 실패도 있다. 최근 몇십 년 사이, 프랑스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사회당은 집권했을 때 지지자들을 배신했고 지금은 사실상 당이 사라졌다. 4월 10일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사회당은 고작 1.74퍼센트를 득표했다. 사회당의 친(親)부유층적 통치는 수많은 노동계급이 파시스트들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급진 좌파 장뤼크 멜랑송의 책

▶ 3면으로 이어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논쟁에서 길 찾기

지금처럼 거대한 제국주의 전쟁을 헤쳐나가는(그리고 바라건대 살아남는) 경험은 매우 교육적이다. 예컨대 지배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실재함을 확인시켜 준다. 예를 들어 전쟁 옹호자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표현을 쓰는 것을 보라. 러시아를 한결같이 “도둑정치 체제”나 “마피아 국가”로 일컫는다. 마치 그래서 미국과 나토의 정책이 정당화된다는 뜻이 말이다.

거듭되는 모욕도 교훈을 준다. [영미권에서는] 나토를 비판하면 “탱키”라는 딱지가 따라온다. “탱키”라는 표현은 원래 1956년 헝가리와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대중 운동을 진압하려고 탱크를 보낸 당시 소련을 옹호한 스탈린주의자를 일컫는 말로 생겨난 것이다. 이런 딱지는 우리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당원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잘 붙지 않는다. 우리가 속한 정치 경향 [국제사회주의경향]은 냉전이 본격화되던 1950년에 “워싱턴[미국]도 모스크바[소련]도 아닌 국제사회주의”라는 슬로건에 기초해 창설됐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의 전쟁에 대한 최상의 비판자들은 스탈린주의에 대한 반대로 명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뉴 레프트 리뷰》는 냉전기에 우리와 똑같은 노선을 취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스탈린주의 지배 체제에 대한 좌파적 반대를 줄곧 지지했다. 그리고 이런 비판적 입장을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에 대해서도 계속 견지했다.

필자는 《뉴 레프트 리뷰》의 파트너 출판사 버소의 신간 두 권을 읽고 있다. 토니 우드의 《푸틴 없는 러시아》(2018)는 러시아의 모든 것이 푸틴의 사악한 개성에서 비롯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우드는 러시아가 여러 면에서 “정상적인”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라고 주장한다.

《반대파 중의 반대파》(2022)는 러시



러시아군 철수, 나토 확전 반대 런던에서 열린 전쟁저지연합의 반전 집회

아 사회주의 저술가·활동가인 일리아 부드라이츠키스의 글들을 엮은 책이다. 이 글들은 푸틴이 침공을 정당화하며 내세운 권위주의적 대(大)러시아 국수주의 이데올로기를 탁월하게 해부한다. 부드라이츠키스는 1950년대 이래 스탈린주의 정치체제하에서 생겨났던 수많은 마르크스주의적 반대파들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매우 흥미로운 장문을 쓰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그 반대파들은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에 의해 모조리 분쇄됐다. 푸틴은 KGB에서 일한 바 있으니, 그의 반(反)마르크스주의는 정말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역사적 책임

이번에 나온 《뉴 레프트 리뷰》 특별 통합호도 이 같은 비판적인 마르크스주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우크라이나에 관한 세 편의 글이 가장 중요하다. 그중 하나는 우드가 썼고 그의 저서에서 했던 분석을 토대로 한다.

“러시아 정부는 이 전쟁을 일으킨 책임이 있고, 결과와 상관 없이 이 전쟁

이 이미 낡은 파괴에 무거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하지만 정당한 분노와 우크라이나인들에 연대하라는 즉각적 촉구가 역사적 책임에 관한 더 큰 물음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미국과 나토의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수십 년간의 지정학적 경쟁에서 가장 강력한 진영으로서, 침공의 맥락을 형성하는 데에 일정한 구실을 할 수밖에 없었다. … 러시아가 저지른 일이나 푸틴의 머릿속만 들여다보는 분석은 모두 기껏해야 편향된 착각이고, 가장 나쁘기로는 고의적 왜곡이다.”

《뉴 레프트 리뷰》 편집자 수전 왓킨스는 이번호 시론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옛 소련 붕괴 후 러시아의 약점을 가차없이 이용해 나토를 동진(東進)시킨 책임이 있다는 논지를 더 발전시킨다. 왓킨스는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리언 파네타의 이런 말을 인용했다. “우리가 뭐라고 하든 이 전쟁은 러시아를 상대로 한 대리전이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의 좌파 사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화학자 볼로디미르 이센코와의 흥미진진한 인터뷰가 있다. 이 인터뷰는 2013~2014년 키예프(키이우)에서 벌어진 “유로마이단” 시위 이후, 어떻게 더 강경하고 반(反)러시아적인 민족주의를 제도화하라는 극우의 요구를 “광범한 민족주의적·자유주의적 시민사회 진영”이 수용했는지를 추적한다.

“유로마이단 이전까지만 해도 매우 과격해 보였던 요구들이 적어도 활동가 집단이라고 부를 만한 층에서 갑자기 보편적이 됐다. 물론 그런 요구들은 실제로 사회 대다수의 지지를 받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이은 대선에서 페트로 포로셴코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승리한 것은 “민족주의적·자유주의적” 진영의 선거적 패배를 뜻했다. 그러나 두 대통령 모두 “민족주의적·자유주의적” 진영에 굴복했다.

그리고 이런 민족주의적 거품이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힘을 재확립하려는 푸틴의 갈수록 필사적인 시도와 충돌한 것이다. 《뉴 레프트 리뷰》와 《소셜리스트 워커》,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이 제시하는 것과 같은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은 이런 충돌이 낳은 공포를 헤쳐 나가는 데서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02호 / 번역 김준호

▶ 2면에서 이어짐

임도 크다. 멜랑송은 1차 대선에서 22퍼센트를 득표했는데, 이는 르펜보다 겨우 42만 표 적은 것이었다. 멜랑송은 많은 대도시 노동계급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멜랑송에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선 투표소도 몇몇 있었다. 투표에 참가한 무슬림의 69퍼센트가 멜

랑송을 지지했다.

이 세력으로 대규모 시위를 조직할 수도 있었다. 멜랑송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 “결선 투표에서 누가 당선하든, 거리 시위에 나서십시오. [투표 다음 날인] 월요일에 일하러 가지 마십시오. 그 날을 파시스트에게든 은행가에게든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날로 만듭시다.”

그러나 멜랑송은 그러지 않고 선거에 전적으로 집착하고 있다. 멜랑송은 유권자들에게 6월 총선에서 자신을 총리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으며, 공산당·녹색당과 극좌파 정당인 반자본주의신당(NPA)과 선거연합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책략으로 극우를 저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5년 동안 결정

적 전투는 작업장과 거리에서 벌어질 것이고, 그러한 투쟁은 노란 조끼 운동, 2019년 연금 개악 반대 파업, 여성 운동, 환경 운동,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기반 삼아 건설될 것이다. 이런 투쟁들이 기성 세력 전체에 맞서는 정치적 도전의 토대가 돼야 한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02호 / 번역 박이랑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가 중화기 지원을 급격히 늘리다

샘 오드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키우고 있다. 이들의 추가 개입으로 우크라이나에는 훨씬 더 많은 무기가 쏟아져 들어가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한층 더 통합될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자체는 자립에서 더 멀어질 것이다.

4월 23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에게 군사 원조의 “새 장(章)”에 관해 얘기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 부실장 안드리 시비가는 밝혔다. 또, 이번 원조에는 중화기도 포함될 것이며, 젤렌스키와 존슨이 자금 추가 지원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다음 날인 24일에는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과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키예프(키이우)에서 젤렌스키를 만났다.

오스틴은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벌인 일을 다시는 벌이지 못할 정도로 약해지기를 바란다.”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미국의 전략이 바뀌었고 “미국 전현직 관료들에 따르면 전쟁 초기의 신중함이 대부분 폐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정책 변화는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에 지원하기 시작한 무기의 종류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한 달 전 폴란드가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 공군에 제공하려 하자 미국은 반대했다.

“이제는 강조점이 바뀌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투기 20대가 다시금 작전에 나설 수 있도록 예비 부품 공급을



우크라이나를 서방 제국주의에 몰아매는 것은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미국 국방장관과 국무장관 사이에 서 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도모하고 있다.

“미국이 전투에 공급하는 중화기의 범위도 엄청나게 늘었다.

“화물 수송 항공편(대개 미국이 운용한다)이 하루에 8~10회 우크라이나 서쪽 국경 인근에 착륙한다. 이 항공편은 수억 달러어치 물품을 실어 나르는데, 그 물품 중 중화기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영국도 나토 무기 지원의 규모와 범위를 늘리려 한다. 영국은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하는 탱크와 중화기를 벌출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영국과 독일은 동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에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의 탱크와 중화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새 무기를 제공해 공백을 메워 주겠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를 서방의 영향권에 더 단단히 묶을 것이다. 존슨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소련제 T-72 탱크를 제공하면 영국이 이를 “매꿔주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안보 보장” 계획을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무기·훈련·첩보를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조인하지 않고도 나토 회원국 지위

를 얻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다.

독일 국방장관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도 무기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은 동유럽 국가들의 무기고를 독일제 무기로 다시 채워 줄 것이다. 슬로베니아가 우크라이나에 T-72 탱크를 대량 제공할 예정인데, 독일은 그에 맞춰 슬로베니아에 독일제 마르더 탱크와 폭스 차륜형탱크를 제공할 것이다.

람브레히트는 독일이 우크라이나군에 독일제 자주포 판처하우비체2000 사용법을 훈련시킬 것이라고도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탱크는 네덜란드가 우크라이나군에 공급한 것이라고 한다.

영국, 우크라이나에 특수부대 파병 의혹

러시아는 영국 공수특전단(SAS) 소속 사보타주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서부에 배치됐는지 여부



를 조사 중이다. 4월 23일에 러시아의 최고 수사기관은 폴란드 국경에 인접한 우크라이나 서부 리보프(리비우) 지방에 SAS가 파견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러시아 언론의 보도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한 안보 소식통은

SAS 요원 약 20명이 우크라이나에서 작전 중이라고 했다. 영국 특수부대가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혐의는 심각한 것이다. 푸틴은 서방 국가들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특별 군사 작전”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영국군에게서 대전차미사일 운용법을 훈련받았음을 시인했다.

그런데, 지난주에 영국 국방안보미디어자문위원회는 관련 정보를 통제하려고 <소셜리스트 위커>와 몇몇 언론

매체에 이 소식을 보도하지 말라는 통지를 보냈다.

영국의 군사적 책략은 비밀리에 벌어진다고 해도 [서방과 러시아] 양측 모두에서 전쟁 물의를 부채질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가 SAS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분명치 않다. 러시아의 보복 행위는 훨씬 더 큰 고통을 야기하고 무고한 이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 5면으로 이어짐



사진 출처 NATO

나토는 동유럽에 무기와 병력을 쏟아붓고 있다. 루마니아에서 훈련 중인 미군

▶ 4면에서 이어짐

러시아 석유를 구매하는 중국과 인도

서방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 세계가 러시아에 맞서는 형국으로 묘사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서방의 경쟁국들은 미국·유럽연합의 경제 제재에서 이득을 챙기려 애쓰고 있다. 특히 석유 무역에서 그렇다.

중국과 인도는 자국의 제조업을 부양시키려 애쓰면서 석유를 최대한 사들이고 있다.

이번 주에 중국의 국영 석유 대기업 중국해양석유(CNOOC)·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중국석유화공(SINOPEC)은 러시아 석유·가스에 대한 영국계 석유

대기업 쉘의 투자 지분 40억 파운드[약 6조 3700억 원]어치를 매수하려 협상 중이다. 협상이 타결되면 중국은 세계 최대 수준으로 석유·가스 매장량이 큰 이 나라에서 더 많은 지분을 갖게 될 것이다.

최근 몇 주 동안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적극적으로 늘려왔다. 2월 하순 이래로 인도 정부는 러시아산 석유 1300만 배럴을 추가 주문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자체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다. 경제 제재를 받는 와중인데도 말이다.

돈바스로 가는 ‘고스트 드론’

지난주에 미국 국방부는 미국 공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위해 신형 “고스트” 드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피닉스 고스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드론은 미국이 추가 제공하는 8억 달러(약 1조 원)어치 무기 지원 패키지의 일부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요구에 맞춰 공군이 신속 개발한 것”이라고 했다.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방에서 벌어지는 전투에 적합하다고 한다.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의 대규모 군수 기업 제너럴아토믹스와 드론 ‘MQ-9 리퍼’ 제공을 협의 중이기도 하다. 이 드론은 대당 3000만 달러가 넘는데, 미국 정부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정부의 지원 덕에, 이 드론들은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군 조종사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제너럴아토믹스 대변인의 말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02호 / 번역 김준호

메이데이: 투쟁하는 노동자 계급의 날

투쟁하는 노동자의 날, 메이데이(5월 1일)가 올해로 132주년을 맞이했다. 메이데이는 1886년 들불처럼 타올랐던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쟁취 투쟁을 기념하기 시작한 데에서 비롯했다.

당시 성장하던 산업자본주의는 노동자들에게 끔찍한 처지를 강요했다.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도 거셌다.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실업, 긴 노동시간 등에 맞서 싸웠다. 그리고 투쟁 과정에서 점차 조직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경제가 불황일 때 노동자들은 자신감이 크지 않았다. 투쟁은 임금 삭감과 실업에 저항하는 방어적 수준에 머물렀다. 경기가 호전되자 노동자들도 싸울 수 있는 자신감을 회복했다.

1886년 미국 경제가 호황에 접어들자,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문제 등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파업을 벌였다. 파업 참가자 수는 몇 년 전보다 세 배나 증가했다.

그 전 몇 년 동안 성장해 온 노동자 조직인 노동기사단이 이 투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노동기사단은 1886년 5월 1일부터 8시간 노동제 운동을 대규모로 벌이기로 하고 몇 개월 전부터 헌신적으로 조직하기 시작했다.

5월 1일 전후로 수십만 명이 파업에 돌입하고 시위에 참가했다. 거대한 투쟁은 곳곳에서 승리를 안겨 주었고, 다른 투쟁을 고무했다. 유럽보다 늦게 시작한 미국 노동운동은 거대한 단결력과 전투성을 발휘해 유럽보다 먼저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본가들과 국가의 반격도 필사적이었다. 그들은 급성장하는 노동운동을 파괴하고 싶어했다. 시카고에서 탄압이 가장 극심했다.

5월 3일 시카고 헤이마켓 광장 시위에 경찰은 테러로 응수했다. 파업 노동자들이 살해당하고 시위는 완전히 금지됐다.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줄줄이 체포됐다. 체포된 지도자 7명 중 4명이 사형당했다.

“들불을 끌 수는 없으리라”

하지만 노동자들의 투지는 꺾이지 않았다. 사형당한 지도자 중 한 명인 스파이스는 감명 깊은 최후진술을 남겼다.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가라! … 그렇다,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앞

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끊임 줄 모르고 불꽃은 타오르고 있다. … 당신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는 없으리라.”

미국 노동자들의 들불 같은 투쟁은 유럽의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었다. 제2인터내셔널은 1890년 5월 1일부터 영웅적인 미국 노동자 투쟁을 기념하는 국제적인 시위를 조직하기로 결정하고, 8시간 노동제 운동을 확대했다. 이것이 메이데이의 기원이다.

1890년 5월 1일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벌어졌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는 5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는 노동자 80만 명이 동맹 파업을 벌였다. 벨기에에서는 34만 명이 메이데이 행사에 참가했다. 1년 뒤에는 파업과 시위가 유럽 전역으로 확대돼 수백만 명이 메이데이에 참가했다.

그 뒤 메이데이는 전 세계 노동자들이 단결해 투쟁하는 날로 자리잡았다.

반전 운동의 기폭제 되기도

1914년 제1차세계대전 당시 메이데이는 반전 운동의 기폭제 구실을 했다. 전쟁 초기에 반전 운동은 활발하지 않았다. 심지어 제2인터내셔널에 포함된 노동자 정당들도 전쟁을 지지하던 상황이었다.

독일 사회주의자 칼 리프크네히트가 의회에서 유일하게 전쟁 반대표를 던지며 반전 주장을 펼친 뒤에야 반전 주장들이 공공연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리프크네히트는 제1차세계대전이 시장을 쟁탈하기 위한 제국주의 전쟁이며, 다른 나라 노동자들뿐 아니라 독일 노동자들에게도 전혀 이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독일 국가는 칼 리프크네히트와 로자 룩셈부르크 등 반전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했지만, 1916년 독일 노동자들은 메이데이를 기점으로 반전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1916년 독일 노동자들의 반전 운동은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이어졌고 1918년 독일 혁명을 통해 제1차세계대전을 끝장내는 출발이 됐다.

이런 메이데이 투쟁의 역사는 오늘에도 이어지고 있다.

투쟁하는 노동자의 날 메이데이의 역사는 노동자의 국제 연대를 통해 세계적 정의를 쟁취한 역사다. 오늘날 그 의미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정병호

검찰 수사권 박탈 합의 파기

권력자들 간의 이해 갈등 속에 서민층이 피해 볼 수 있다

김문성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에 합의한 지 사흘 만에 합의가 깨졌다.

합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이 재논의를 직접 거론했다. 윤석열이 중재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파기의 후폭풍이 다른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4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하자마자 고성과 항의가 오가다가 청문 절차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끝났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요구한 자료 대부분을 한덕수 측이 제출하지 않은 것이 쟁점이 됐다.

애초 여야간 합의된 검찰 수사권 관련 중재안은 검찰에 남아 있는 직접 수사 대상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경제 관련 수사권만 중수청 설립 때까지 남기고 나머지는 올해 안에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이 합의대로 입법이 되면, 윤석열 정부와 소수파 여당이 거대 야당을 상대할 중요한 무기 하나를 포기한 셈이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반발이 컸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가 중단될까 봐 예민하게 반응했다. <조선일보>는 이 합의로 피해를 볼 수

사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핵발전소 서류 조작 등을 콕 집어 거론했다(4월 25일 사설). 모두 문재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안들이다.

요컨대, 국민의힘 강경파의 불만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견제할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상대방 비리에 대한 '선택적' 수사권일 뿐이다.

합의가 흔들리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단독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합의와 파기 과정 모두 결국 신규 정권이 새 정부 임기 초 기선 잡기로 이 문제에 임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검찰 수사권 합의와 파기 과정은 신규 정권이 기선 잡기로 이 문제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은 위선

우파는 4월 22일 합의를 두고 정치인 비리 수사를 덮는 야합이라고 비난한다. 검찰총장 김오수도 고검장들과 집단 사표를 내면서 이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권력층 눈치나 봐 왔고, 서민 피해 사건에는 별 관심도 없었던 것이 진실이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이 합의를 맹비난했다.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빼버린 것이다. 자기 범죄를 덮고 수사를 몽개기 위해 여야가 정치적으로 야합했다. ...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나.”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 합의로 인해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박탈에 반대한 명분이 약화된 것을 걱정하는 것뿐이다. 이들도 정권이 교체된 만큼 검찰 권한을 옹호한다.

우파의 반발이 커지자 윤석열이 중재안에 반대했다. 윤석열은 지난주 금요일 합의 뒤 주말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어쩌면 이번 중재안을 통해 자신과 처가에 대한 수사도 중단되길 내심 바랐는지도 모르겠다.

사실 윤석열이 지난해 3월 검찰총장을 사퇴한 것도 바로 '검수완박'[검찰 수

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문제 때문이었는데, 당시 그는 “검수완박은 부패완박(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것)”이라고 말해 화제를 일으켰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인수위는 25일 새 정부의 국정 방향으로 “공정·상식·실용”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장관 후보자는 아들 병역 비리 의혹에 셀프 검증으로 버티며, 검찰 수사권 문제에서 윤석열은 이득 계산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한다.

검찰 수사권 박탈

권력 다툼이 본질이지만 서민층이 피해 볼 수 있다

지금 다툼의 주된 대상은 검찰의 수사권·수사지휘권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지휘권이다. 이제 검찰의 지휘권자가 바뀌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칼날을 무디게 하겠다는 것이고, 윤석열은 그게 싫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봐야 할까? 사실 기소권을 가진(독점) 검사를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공상이다.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사지휘권 뿐 아니라 보완 수사 요구로도 수사의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이렇게 소개한다. “수사지휘권 [형사가] ...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미국에서도] ... 검찰이 게이트키퍼(기소를 위한 관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기소 의견을 가진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이행할 뿐이다.”(<경향신문> 4월 25일)

경찰이 수사는 했지만 기소할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박 교수는 이런 경우를 포함해 경찰의 권한 강화 문제에 경고를 보낸다. “집회 시위 탄압을 보면 경찰이 절대 덜하진 않았다. ...

[또한] 수사 지연이나 과소 수사를 통해서도 정치력(?)은 발휘될 수 있다.”

경찰이 기소 의사가 없어서 “수사 지연이나 과소 수사”를 하는 경우는 대체로 서민 피해 사건, 산업재해 사건, 특권형 부패 같은 사건일 것이다. 이는 새로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는 지금 검찰도 빈번히 하는 일 아닌가?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도 그동안의 검찰 수사를 불신한다면서도 경찰에 대한 견제가 줄어드는 것의 문제를 지적한다. “경찰로 완전히 물리게 될 수사권이라는 거대한 공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지에 대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 서민, 민생 사건의 범죄피해자가 사실상 불복 절차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CBS 라디오 <한판승부> 4월 22일)

결국 신기루에 불과한 민주당의 검찰 개혁 목표가 오히려 기존의 문제점은 해소하지도 못하면서 경찰 강화라는 부작용만 낳는 것이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과 경찰 강화를 대국민 사기극으로 봐야 하는 이유다. 특히 검찰이나 국민의힘에 우려나 반감이 있는 개혁의원층을 겨냥한 데마고기인 것이다.

인간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려라

김미연 초등특수교사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이다.”

발달장애인과 가족 556명이 4월 19일에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했다. 지켜보는 이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현재 경북 공역사 안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새 정부에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4월 19일 윤석열 인수위원회가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질적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였다. (관련 기사: 본지 414호 윤석열 정부의 장애 정책 — 빈 강통에 불과)

발달장애인 정책도 그렇다. 인수위는 장애인 일자리와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두루뭉술한 말만 있을 뿐 장애인들의 구체적 요구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예산 등 실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도 없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려면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다.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이유다.

발달장애인의 처지

우리 나라 발달장애인은 지난해 기준 25만 5207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9.6퍼센트를 차지한다.

생산 효율성을 최고로 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달장애인들은 ‘평균적으로’ 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부분 사회에서 배제돼 왔다. 개별 가족에 오롯이 떠넘겨진 돌봄 책임은 사회와 분리된 시설 수용으로 발달장애인을 내몰았다. 현재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80퍼센트가 발달장애인이다.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적절한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그래서 가난한 가정 안에서는 온갖 비극이 일어나곤 한다.

지난해에도 수원에서 8살 난 발달장애 아동이, 시흥시에서 20대 지적장애 성인이 부모에 의해 생을 달리했다. 두 가정 모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를 두고 “사회적 타살”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코로나19는 발달장애인 가정을 더욱



4월 2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집회 '24시간 지원체계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발달장애인이 그나마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주간활동서비스, 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시설 등이 휴관하면서 당사자들은 집에 ‘갇혀’ 지내야 했다.

일상의 붕괴는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이 악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고, 가족의 부담도 더 커졌다. <코로나19 기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 조사>(국가인권위) 결과를 보면, 발달장애인 가족의 20.5퍼센트가 돌봄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야 했다고 답했다.

또, 발달장애인들은 학령기가 끝나면 대부분 갈 곳을 잃는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있지만 누적 기간 5년이 지나면 이조차 떠나야 하는 현실이다.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렵다. 겨우 구하더라도 최저임금조차 적용이 안 돼(최저임금법 7조) 월급이 2021년 기준 평균 37만 원밖에 안 된다.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은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10년 넘게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며 삭발, 단식, 농성 등 투쟁해 왔다. 덕분에 2014년에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는 등 관련 정책이 조금씩 생기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뒤통수 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이런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8년에도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국가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209명 보호자의 삭발, 2500여 명의 삼보일배, 청와대 앞 농성을 했다. 그 해 9월 문재인 정부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정작 2019년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이를 뒷받침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은 191억 원에 불

과해 성인 발달장애인 17만 명 중 고작 1.5퍼센트인 2500명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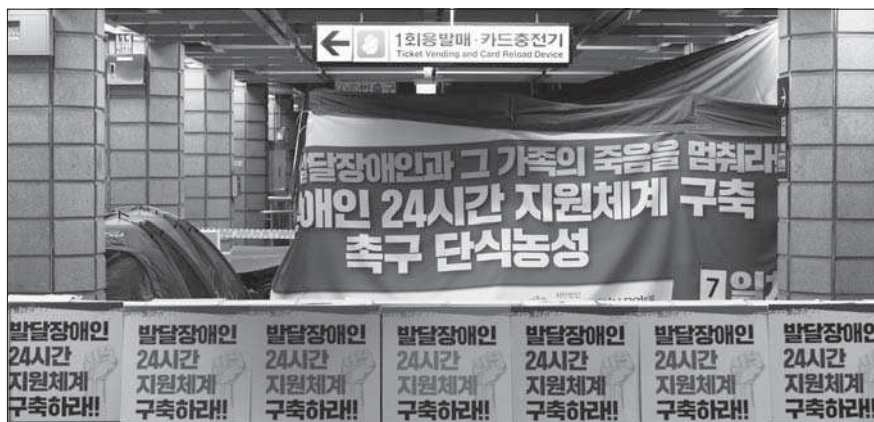
게다가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에 받던 활동지원서비스를 대폭(최소 40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삭감했다. 아랫돌 빼서 윗돌 끼는 식이었다. 2022년까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을 1만 7000명,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을 2만 2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예산이 삭감돼 두 서비스 대상자는 각각 당초 계획의 절반가량 수준인 1만 명밖에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여느 개혁처럼 말만 번지르르하고 뒤통수를 친 것이다.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시급하고 절실한 요구다.

나의 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란다. 그러려면 국가가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성인이 돼도 일할 수 있도록 장애 특성에 맞는 직업 교육을 늘리고 원하는 업무를 배우고 익히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들도 필요한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장애 때문에 가난한 가정에서 비극이 반복되는 현실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투쟁에 지지를 보낸다.



윤석열 인수위 앞 경북공역에서 농성하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일본인·한국인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사도광산과 일본 제국주의

이 기사는 같은 제목으로
열린 4월 21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QR코드)
의 발제문이다.



하세가와 사오리

인하대 의대 박사후연구원.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731부대》 공역자

안녕하세요. 하세가와 사오리입니다. 저는 사도광산에 대한 일본 내 논의를 중심으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일본에서도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주로 조선인 노동자 문제입니다.

일본 정치인들과 주류 언론의 기본 입장은, 사도광산의 조선인 노동자는 일본인 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받았고 강제징용 사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강제징용이 있었다는 한국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도 “강제 노동이라고 할 수 없다”, “역사전쟁터를 꾸려 일본의 자랑과 명예를 지켜나가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광산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 역사서나 당시 광산을 운영한 사도광업소가 작성한 자료에 기록된 조선인 노동자의 모습은 그런 주장과는 크게 다릅니다.

조선인 ‘모집’의 동기

마을 역사서에 따르면, 사도광업소는 1939년 2월에 처음으로 조선인 ‘모집’을 시작했는데, 당시 노무과 직원이었던 한 관계자는 조선인 모집을 하게



사도광산에서 바위를 뚫는 노동자(1935년)

된 이유에 대해 “내지인(즉 일본인) 광내 노무자 중에 규폐를 앓고 있는 사람이 많아 출광 성적이 좀처럼 늘지 않는다. 데다 내지의 젊은이들을 잇따라 군대에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규폐는 광산을 채굴할 때 나오는 석영(石英)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생기는 폐질환입니다. 사도광산의 모석(母石)에는 석영이 많이 함유돼 있어 노동자들이 규폐에 걸릴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처럼, 전쟁과 규폐로 인한 인력 부족을 조선인 노동자로 채우려 했다는 점에서 제국주의적 동기와 조선인 차별이 잘 드러납니다.

조선인 노동자의 처지

사도광업소는 1940년 2월 ~ 1942년 3월에만 6번에 걸쳐 총 1005명의 조선인 노동자를 모집했는데,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의 처지를 간단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① 조선인 노동자들이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는 사도광업소가 1943년에 작성한 『반도 노무 관리에 대하여(半島口務管理ニ付テ)』라는 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43년 5월 자료를 보면, 조선인이 주로 맡은 일은 바위에 구멍을 뚫는 착암이나, 기둥 등이 무너지지 않게 받치는 지주 작업이나 운

반처럼 주로 갱내에서 하는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당시 광산에 종사한 관계자도 “내지인 노동자들은 주로 해안에서 자갈을 수집하는 작업에 종사했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갱내 채굴 작업은 주로 조선인이 맡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 조선인이 일본인과 대등했다거나 차별이 없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② 임금 면에서도 아베 전 총리 등의 주장은 ‘팩트’와 거리가 멉니다. 조선인 노동자도 일본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나이 경험, 업무 종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책정한 단가에 따라 급여를 받았고, 급여 외에 각종 상여금이 부여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선인 노동자는 대부분 농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아무래도 조선인에게 불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노동자들은 식비와 침구류 이용비, 작업에 필요한 물건마저도 자기 돈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저축 장려라는 이름으로도 급여에서 돈이 공제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 수중에는 돈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③ 게다가 조선인 노동자는 원래는 2~3년 일하고 귀국하기로 ‘계약’을 하

고 사도광산에 왔지만, 사측은 조선인 노동자를 돌려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1943년에 사도광업소가 직접 작성한 문서에는 “국가적 필요성을 충분히 헤아려 어떻게든 전원 계속 일을 시키도록 할 것”이라는 방침이 명시돼 있습니다.

사측이 작성한 ‘관리 방침’에는 “도망방지”라는 항목도 있는데요. 조선인 노동자는 미쓰비시 광업 노사협조기관인 교와카이(協和會), 반관반민 기관인 광산통제회, 특별고등경찰이라는 세 기관의 촘촘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당시 작성된 자료와 마을 역사 기록 등을 볼 때, 조선인 노동자 동원이 ‘모집’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강제 노동에 가까웠음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징용은 없었다거나 조선인 차별이 없었다는 말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본의 국회 토론 등에서 ‘16세기부터 19세기 사이의 유물로 시기를 한정해 유네스코에 추천했기 때문에 [사도광산 등재 추진은] 한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사도광산에서 벌어진 일을 무시한 채 세계유산으로 추천하는 것은 조선인 노동자를 차별하고 흑사한 역사를 정당화하는 행위입니다.

전쟁과 규폐로 인한
인력 부족을
조선인 노동자로
채우려 했다는 점에서
제국주의적 동기와
조선인 차별이 잘 드러납니다



사도광산으로 징용 간 조선인 청년들(1941년)

일본인 노동자도 가혹한 착취와 억압에 시달렸다

게다가 사도광산의 역사는 조선인 노동자가 투입되기 전부터 착취와 억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광산 채굴이 본격화된 것은 1542년부터인데요, 그때부터 일본인 노동자들은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노동자들은 대체로 단명했다고 합니다. 1943년부터는 광산 근교에 거주하는 일본인 학생, 노동자, 부인회도 동원됐습니다.

사도광산을 소유한 미쓰비시광업이 운영한 다른 광산, 예를 들어 훗카이도

미쓰비시 비바이 탄광에서도,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노동자들이 비인간적인 노동 현장에서 업무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가혹한 노동사를 무시한 채 광산의 과학기술 역사에만 주목해 '일본의 귀중한 유산' 운운하며 찬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가사키의 군함도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혹한 노동을 강요받은 조선인, 중국인, 일본인의 역사를 밝히고 기억하는 것이 유네스코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수이지만 의미 있는 일본 내 목소리

마지막으로 일본에도 진실 규명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대 초에 사도광산 문제에 주목해 조선인 문제에 대한 논문을 쓴 히로세 데이조 교수를 비롯한 학자, 언론인, 시민들이 있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일본 국가가 저지른 어두운 역사를 기억하며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1960~1980년대에는 탄광 노동조합이 전쟁 중의 노동 실태를 밝히거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

을 전개하는 등 활발한 운동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회에 영향을 끼칠 만한 운동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 특히 미쓰비시 노동자들이 현재의 노동조건 문제와 더불어 과거사까지 꼬집으며 운동을 건설하면 효과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향후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의 노동자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움직임을 돕는 작은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김승주

《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 공저자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시도는 일본 정부가 추진해 온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만들기' 프로젝트의 연장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로, 일제 시대 강제동원 현장인 군함도를 포함해 여러 근대 산업시설들이 이미 2015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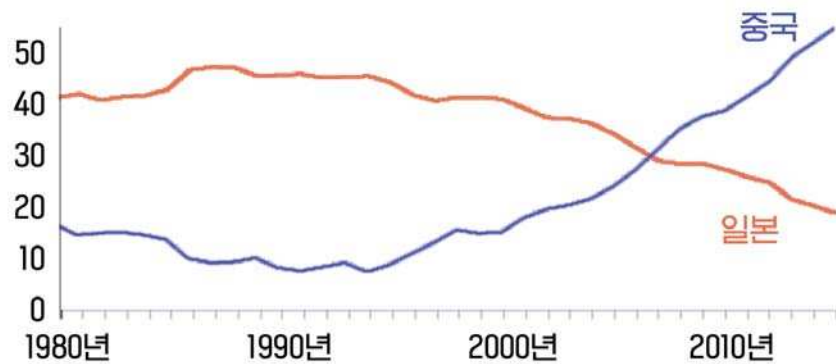
유네스코는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국제 힘 관계와 무관하게 인류의 유산을 등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군함도는 등재된 반면 위안부 관련 기록물 등재는 보류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일본 정부는 근대 산업유산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 일본 역사를 "자랑스러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일본의 우파 정치인 아베 신조는 일본이 "사죄와 반성만 되풀이하는 부끄러운 나라"에서 벗어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면 입 다물게 만들려 한다든가,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일으켜 많은 아시아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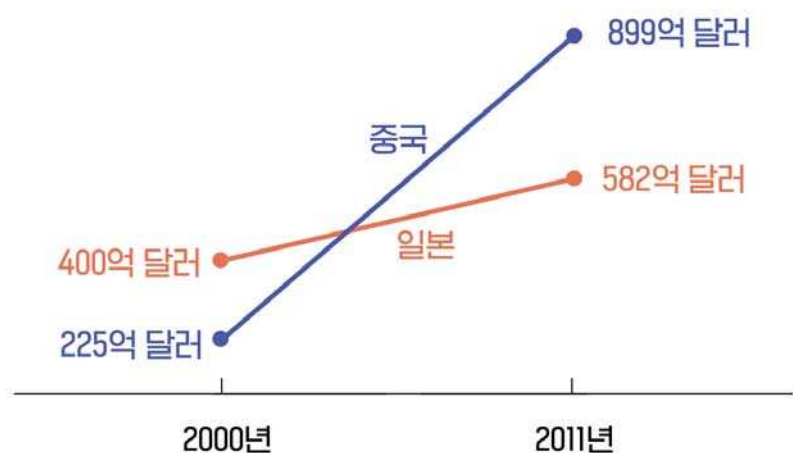
이 밖에도 일본 정부는 역사 교과서를 개정하고, 고노 담화처럼 전쟁범죄에 대한 도의적 사과에 그친 담화마저 수정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과거사를 왜곡하고 미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오늘날의 세계 정세,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긴장과 갈등이라는 맥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역전된 중국과 일본



동아시아 GDP에서 각국이 차지한 비중의 변화



국방 예산의 변화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는 이유

오늘날 일본의 위상은 1980년대에 비하면 꽤 하락했습니다. 1980년대에 일본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자 아시아 지역의 명실상부한 최강대국이었죠.

반면 중국은 1990년대 이후 무서운 기세로 부상했습니다. 그 결과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경제 규모 세계 2위에 올라섰고, 2011년에는 국방비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아시아·태평양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그 핵심 동맹인 일본에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중국이 성장하자 아시아의 그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한국만 해도 2000년 이전에는 미국·일본 무역으로 먹고살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중국과의 무역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또, 중국은 힘이 세지면서 인근 바다와 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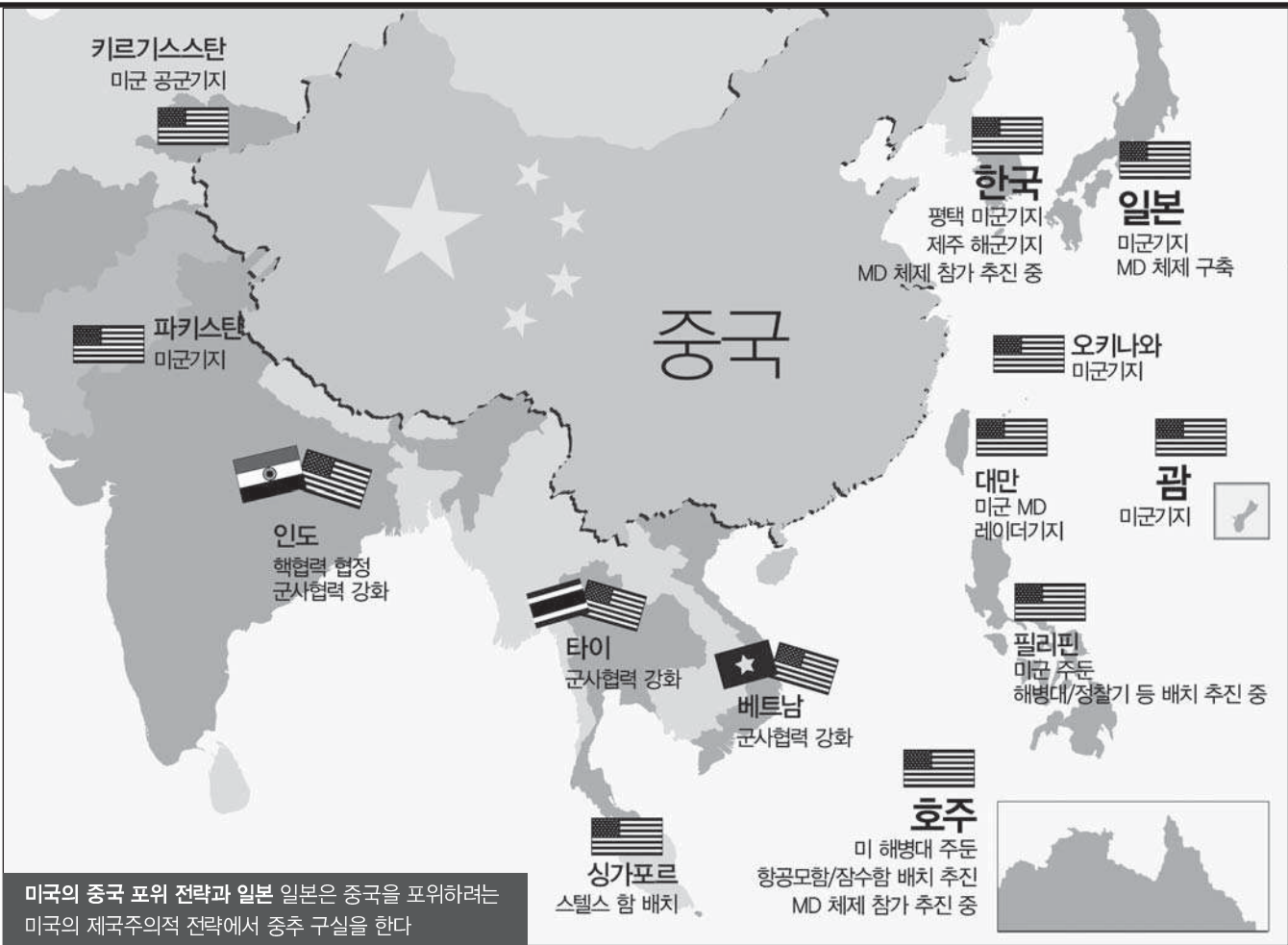
이런 변화에 대응하고자 미국은 아시아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을 통해 중국을 포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전략에서 중추 구실을 하는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동맹을 구축하려는 것이죠.

이와 맞물려, 일본 지배계급 내에서는 공격형 군사력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화헌법’을 개정하거나 해석을 변경해, 제약을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국 지배계급 상당 부분도 이를 바라고 있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역사 미화 프로 젝트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베 신조는 2015년 8월,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해 “전쟁 이전의 강한 일본을 되찾자”고 천명했습니다. 침략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가 아닌 재현해야 할 영광”이고 아시아에 이로운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이러는 이유는 과거사가 일본이 지금 하려는 일, 즉 지역적 위상과 군사 개입력을 높이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침략 역사 문제는 중국이 일본을 견제하며 아시아 주변국을 포섭하는 데는 유리한 쟁점인 반면, 일본이 주변국을 중국 포위 전략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일본은 과거사 논란을 집요하게 은폐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계급과 제국주의

일본 정부의 역사 미화 시도는 국내적 의미도 있습니다. 고도 성장과 제국을 이뤘던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면 일본의 온 국민이 뭉쳐야 한다는 애국주의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침략 전쟁에서 대다수 일본 노동자들은 전쟁의 전방과 후방에서 죽음에 내몰리고 가혹하게 착취당했습니다. 사도광산은 그 수많은 사례의 하나일 뿐입니다.

사실 일본 노동자들의 처지는 일본 국가나 자본가들보다 조선인 노동자들과 훨씬 더 가까웠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일본이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국가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도 결코 평범한 일본인들에게 이익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지배자들과 평범한 노동계급은 일본의 과거사와 제국주의 문제에서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자본주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전략에 협력하면서 성장했습니다. 미국

은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고 일본을 성장시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쟁 범죄를 청산하기는커녕 천황제, 대기업 집단(자이바츠, 즉 재벌), 심지어 전범들을 존속시켰죠. 그리고 한국에게 일본과 화해하도록 종용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역대 한국 정부는 일본과 과거사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처음에는 국민 정서와 눈치를 보다가도 결국에는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가 중요하며 유야무야해 왔습니다. 우파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비슷한 패턴을 보였죠.

화해

한국은 더는 미국이나 일본에 종속된 (“신식민지”) 국가가 아니었고, 오히려 지난 수십년 사이에 세계 10위권의 중간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의 한미일 관계를 이해하려면 이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 지배계급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미국·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해 왔고, 그래서 제국주의 체제의 유지가 그들에게 득이 됩니다.

이 점을 보지 못하면, 한국 지배계급 또는 적어도 그 일부가 노동계급과 한판이 돼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기를 기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게서 독립적이지 못한 입장, 곧 민중주의적·민족주의적 입장에서 과거사나 한일 갈등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운동의 전망이 매우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 약속을 저버렸는데도 정의기억연대 등 진보 민족주의·포퓰리즘 지도자들이 이에 도전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또, 2019년 한일갈등 국면에서 정의당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국익을 지키자며 만들어진 민관정협의회에 들어간 것이나, 민주노총이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부품 국산화를 주장한 것도 그런 사례입니다.

한국과 일본 노동자들의 연대

저는 오늘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를 현재의 제국주의라는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사 문제가 오늘날 제국주의 질서에 맞서 싸우는 것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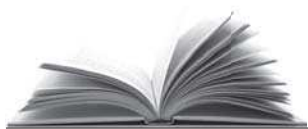
둘째, 일본과 한국 양국 모두에서 과거사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지배계급과 노동계급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계급투쟁적이고 국제주의적인 반 제국주의 운동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국주의에 맞서 서로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함께 싸울 수 있는 주체는 한국과 일본의 노동계급입니다. 우리는 미국·일본 제국주의와 그에 협조하는 한국 정부에 반대하고, 두 나라 노동계

급의 공통의 이익인 경쟁적 군비 증강 반대, 일본 평화헌법 개정 반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등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지금, 계급투쟁적·국제주의적 관점과 운동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평 | 《마르크스주의와 국가자본주의론》

국가자본주의 이론을 간결하게 정리하다

옛 소련, 중국, 북한 등 스탈린(주의) 체제가 자본주의와는 질적으로 다르(거나 그래도 더 나은 데가 있)다고 생각하는 좌파들이 많다. 반면 그 반대로 스탈린 체제가 더 열등한 사회라고 보는 사람들도 꽤 많다.

그러나 스탈린 체제를 국가자본주의로 보는 이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다. 국가자본주의론은 옛 소련과 중국, 북한이 모종의 사회주의 국가나 노동자 국가라는 주장에 반대하고 자본주의의 변형태일 뿐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국가자본주의론 문제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위해 투쟁하느냐는 물음, 다시 말해 사회주의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를 것이냐 하는 물음과 직결돼 있다. 이 점에서 국가자본주의론은 오늘날 세계를 분석하고 혁명적인 정치 대안을 세우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이론이다.

국가자본주의론은 유대계 팔레스타인 마르크스주의자 토니 클리프(본명은 이가엘 글루스타인)가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이전 작업들을 계승해 정초한 이론이다. 진정한 사회주의를 쟁취하고자 분투하는 활동가들은 클리프의 고전적 저작인 《소련은 과연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 국가자본주의론의 분석》(책갈피)를 반드시 읽어야 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그 개념들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라면 클리프의 책을 읽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정한 배경 지식, 원칙과 개념이 다소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톰 오링컨의 《마르크스주의와 국가자본주의론》 출간이 반갑다.

“나는 국가자본주의를 다룬 길고,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낱기까지 한 토니 클리프의 책과 개설서로 쓰인 소책자들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오랫동안 느껴 왔다. 국가자본주의 이론 전반을 간결하게 정리해 주면서도 심화 학습을 원하는 독자에게 적합한 글이 필요했다.”

저자가 밝힌 이 책의 목적이다. 새 세대 청년들과 국가자본주의론을 토론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이 책은 얇다. 그러면서도 국가자본주의론의 역사적·경제적·정치적 측면을 두루 다룬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 고전 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도 러시아도 편들지 않은 입장의 배경에도 국가자본주의론이 있다



마르크스주의와 국가자본주의론

톰 오링컨 지음, 천경록 옮김,
책갈피, 144쪽, 8,000원

르크스주의자들의 제국주의 분석, 러시아 혁명과 반혁명,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트로츠키주의 운동의 커다란 위기와 논쟁, 클리프의 트로츠키주의 재정립,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 중 일부 쟁점들(옛 소련에 임금노동이 존재했는지 여부)을 둘러싼 국제사회주의 경향 내부의 논쟁 등 만만찮은 기간 동안 벌어진 논점들을 얇은 책에서 요령있게 소개한다.

논쟁

주제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국가자본주의론을 둘러싼 논쟁은 대부분의 시기에 주로 소수 좌파 활동가들 사이에서 벌어진다. 그러나 진지한 혁명가는 이런 사상적 대결을 기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논쟁과 실천은 때려야 뭉 수 없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다.

노동자연대 단체가 지지하는 국제사회주의경향은 국가자본주의론에 따라 1989~1991년 동구권의 몰락을 사회주의의 실패나 서방 자본주의의 승리로 보지 않고 관료적(전면적)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로 봤다. 따라서 이후의 시장자본주의로의 변화는 옆길ע이 었지, 반혁명이 아니었다.

그와 동시에, 국가자본주의론은 옛 동구권에 결여됐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는 서방 자본주의를 덜 사악한 체제로 보는 견해도 거부했다.

이처럼 국가자본주의론은 서방 진영과 동구권 진영 모두에 반대함으로써 스탈린주의도 사회민주주의도 거부하는,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라는 혁명적 전통을 보존·계승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자본주의론으로 보면, 서방 진영과 동구권 진영의 갈등을 제국주의 갈등으로 볼 수 있었다. 이 관점은 ‘워싱턴(미국)도 모스크바(소련)도 아닌 국제 사회주의’라는 슬로건으로 요약됐다.

이 관점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최근 사례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제국주의 간 충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좌파는 입장이 갈렸다. 일부 좌파는 러시아의 침공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서방 자본주의를 지지하고, 또 다른 일부 좌파는

러시아를 미국 제국주의를 견제하는 균형추로 본다.

그러나 노동자연대는 국가자본주의론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크라이나를 볼모로 삼아 러시아와 미국-나토가 벌이는 충돌의 일부로 본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 러시아군 철수, 나토 확장 시도 반대, 한국 정부 개입 반대를 요구하는 이유다.

국가자본주의론의 현실성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사건이 2019년 홍콩 항쟁과 2021년 쿠바 반정부 시위였다. 중국과 쿠바를 모종의 사회주의(또는 적어도 서방 자본주의에 비해 진보적인) 사회로 여긴 좌파는 이 투쟁들을 친서방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노동자연대 단체는 이 투쟁들을 지지했다.

이렇듯 국가자본주의론은 계급의 바리케이드 이편이나 저편이나 하는 갈림길에서 노동계급 등 피억압 계급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해 준다. 왜냐하면 국가자본주의론은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을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로 복권시킨 이론이기 때문이다.

국가자본주의론이 옛 소련 사회뿐 아니라 서방 자본주의에도 적용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서구 경제의 최소 3분의 1이 국가 부문이다. 많은 좌파가 국가 부문을 마치 자본주의의 외부에 존재하는 영역처럼 본다. 일부 좌파는 국유화를 사회주의와 동일시하며 좌파적 개혁주의 정치로 이끌린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가 체제의 핵심적 일부라고 보며, 따라서 국유화와 사회주의는 같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끝으로, 이 책은 1984년까지 다루며 끝난다. 그 뒤에(1989/1991년) 동유럽과 소련이 붕괴했고, 저자가 당시까지 산업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중국은 세계 시장에 통합되는 방식으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다.

이후를 보완할 글로 1980년대부터 2020년까지 옛 소련(과 러시아연방)에서 전개된 상황을 다룬 마이크 헤인스의 《다시 보는 러시아 현대사 — 혁명부터 스탈린 체제를 거쳐 푸틴까지》(책갈피)를 추천한다. 1980년대 시장 개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국에 대해서는 이정구의 ‘중국과 제국주의’(*《마르크스21》* 39호)를 추천한다.

김인식

미국 LA 흑인 항쟁 30주년

인종차별이 촉발한 정당한 분노의 표현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이 글은 1992년 4월 29일 LA 흑인 항쟁 분출 며칠 뒤에 당시 한국의 국제사회주의자들(SSK)이 발행하던 신문에 처음 실렸다. LA 흑인 항쟁의 성격과 의미를 잘 보여 주는 글이라고 판단돼, 약간의 편집을 거쳐 본지에 다시 게재한다.

지난 [1992년] 4월 29일부터 일주일 내내 전 세계를 뒤흔든 미국 흑인 노동자들의 항쟁이 막을 내렸다. 5월 4일까지 드러난 공식 집계(사망 58명, 부상 2100여 명, 연행 9400여 명, 건물 손상 5300여 채)는 투쟁이 얼마나 격렬하고 대규모로 일어났는지 잘 보여 준다. 그만큼 흑인 노동자들의 좌절과 분노는 대단했다.

잘 알다시피, 이번 항쟁은 백인 경찰 4명이 흑인 운전자 로드니 킹을 집단 구타하고도 무죄로 풀려난 데서 비롯했다.

그 백인 경찰 4명은 고속도로 상에서 과속 운전을 이유로 로드니 킹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자기 방어 수단도 갖고 있지 않은 그를 5만 볼트의 고압 전기봉으로 실신하게 만들었다. 그것도 모자라 그를 땅바닥에 누어놓고 곤봉과 구둣발로 마구 때려 다리와 얼굴뼈마저도 부러뜨렸다.

그런 만행을 자행한 경찰들에게 미국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 로드니 킹 사건은 경찰이 늘상 흑인, 특히 보통의 흑인들을 잔혹하고 폭력적으로 대해 왔던 행태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미국 전역의 흑인 거주지에서 늘 있어왔다.

이는 미국의 지배계급이 노예제 이래로 끊임없이 부추겨 온 인종차별의 산물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한줌도 안 되는 지배계급이 사회의 압도 다수인 노동계급을 착취하기 때문에, 노동계급이 지배자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노동계급을 분열·반목하게 만드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인종차별이 바로 그중 하나이다. 이 때문에 미국 흑인들은 온갖 사회적 수모와 차별을 받으며 대부분 사회의 최하층을 이루며 살아왔다.

더구나 1980년 이후 미국 경제가 점점 심각한 불황의 늪으로 빠져든 때, 흑인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인종차별적 공격이 이뤄졌다. 흑인 노동인구의 평균 소득은 1975년에도 백인 노동인구의 63퍼센트에 불과했는데, 1991년에는

미국 경찰이 일상적으로 흑인들을 잔혹하고 폭력적으로 대해 온 것은 항쟁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

그 수치가 56퍼센트까지 떨어졌다. 흑인 3명당 1명이 빈곤선(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저소득 기준)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흑인 실업률은 백인 실업률의 두 배에 이른다.

보건 관련 통계는 더욱 참혹하다. 우주 탐사선 보이저호를 쏘아올린 미국에서, 다른 수치는 다 오르는데 흑인의 평균수명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할렘가(街) 흑인 소년들의 예상 수명은 방글라데시 소년들보다 훨씬 낮다. 그들이 죽음에 이르는 가장 큰 이유는 살인이다!

흑인의 소외와 그들에 대한 인종차별은 한계에 이르렀다. 로드니 킹 사건에 대한 그들의 좌절과 분노는 너무도 정당하다.

제일 먼저 항쟁이 일어난 곳은 로스앤젤레스(LA)였다.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는 구호를 내걸고 투쟁이 시작됐다. 투쟁은 처음부터 격렬한 소요

의 형태를 띠었다. 상점이 털리고 건물이 불타는 등 약탈과 파괴가 일어났다. 노동조합도 정치 조직도 없는 그들로서는 소요라는 형태가 아니면 분노를 표출할 길이 없었을 것이다.

이 투쟁은 4월 30일부터 미국 전역으로 번져나갔다. 뉴욕·샌프란시스코·라스베이거스·피츠버그·시애틀·버밍햄 등 주요 도시들 대부분이 화염에 휩싸였다. 흑인들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회 밑바닥에서 신음하던 중남미계와 아시아계, 심지어 일부 백인 노동계급 사람들까지 항쟁에 가담했다.

이들의 참가는 이 항쟁이 단순히 인종차별 때문만이 아니라, 극심한 불황의 대가가 미국 노동계급 전체에 떠넘겨졌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보여 준다. 기업의 도산과 실업·감원·해고는 나날이 늘어나는 반면 각종 복지혜택은 계속 줄어, 미국 노동인구 구조의 최하층을 이루는 사람들은 참혹한 빈곤에 시달리게 됐다. 그런 사람들이 항쟁에 가담함으로써 저항하려 했던 것이다.

항쟁은 흑인들의 투쟁에서 미국 전체 노동 대중의 투쟁으로, 로드니 킹 사건 무죄 판결 규탄에서 체제 자체에 대한 커다란 분노로 바뀌려 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애초에는 선거를 앞두고 항쟁을 조기 진압할지 양보할지

중간계급의 눈치를 살피던 조지 부시 정부(사실 부시 자신이 인종차별로 악명 높다)는 지금이 진압할 때임을 재빠르게 알아차렸다. 흑인 중간계급까지도 소요 때문에 사유재산이 파괴되고 있다고 원성을 높이기 시작한 것이다.

인종차별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공화당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미국 민주당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평결이 부당하다고 떠들기를 그치고 ‘폭동 행위’를 공공연히 비난하기 시작했다.

5월 1일, M16 소총과 최첨단 진압 무기로 무장한 연방군이 출동했다. 투입된 연방군은 1989년 파나마 침공과 1990년 걸프전에 파병됐던 최정예 병력이라고 한다.

결론으로 보면 매우 거칠고 격렬한 것 같은 소요는 조직된 노동자 투쟁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타올랐던 만큼 쉽게 꺼진다(여론과 공권력 앞에서는). 미국 제국주의가 제3세계에 간섭할 때 이용했던 ‘질서’와 ‘민주주의’라는 이름 앞에서, 그때 동원된 것과 똑같은 군대 앞에서, 일주일 동안 벌어졌던 흑인 소요는 쉽게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미국 흑인들의 처지가 별로 나아질 것은 없기에, 머지않아 다시 한번 더 커다란 투쟁이 터져나올 것이다.

▶ 13면으로 이어짐

흑인들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회 밑바닥에서 신음하던 중남미계와 아시아계, 심지어 일부 백인 노동계급 사람들까지 항쟁에 가담했다.

정부의 조선업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계획 이주노동자 환영! 차별 반대!

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가 조선업에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한다. 조선소에 일감이 크게 늘어 부족해진 인력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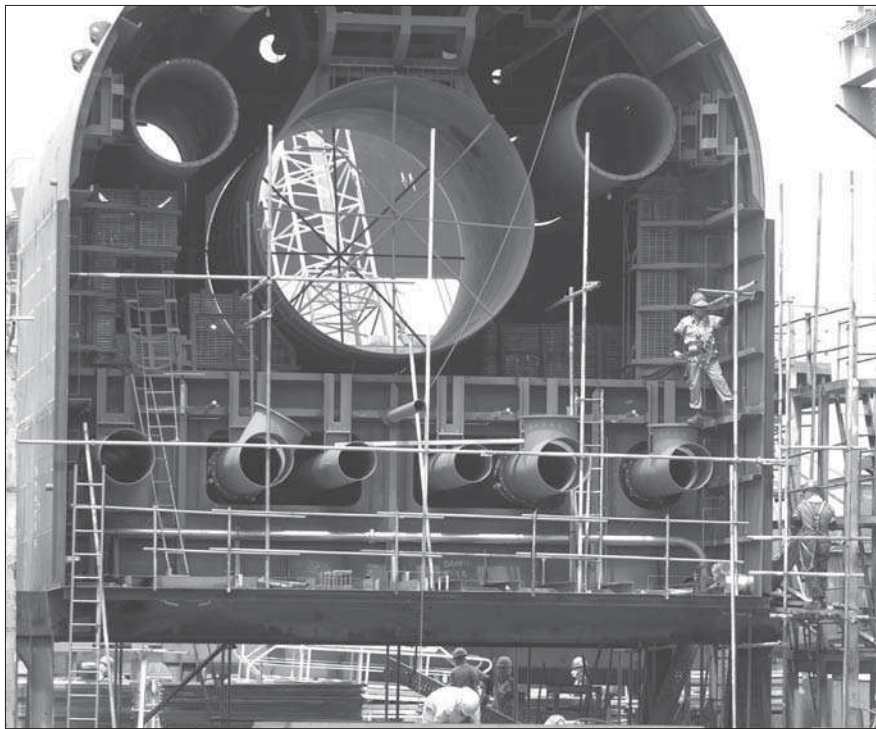
정부는 조선업에 올해 말까지 80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약 4400명이 고용될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여러 차별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주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이 아닌 하청업체로 취업해 고용이 불안정하다.

임금도 더 적을 수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을 전년도 1인당 GNI(국민총소득)의 80퍼센트 이상(지난해 기준 연 3219만 원)으로 정했다. 이는 월 평균 약 268만 원으로 2019년 국내 조선소 노동자 월 평균 임금 약 319만 원의 84퍼센트 수준밖에 안 된다.

사실 인력 부족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건 정부와 사용자들 탓이다. 이들은 그간 조선업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지난 8년간 노동자 10만 명이 해고됐다. 실질임금이 삭감됐고 노동강도는 강해졌다. 하청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임금체불에 시달렸고, 산재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런 조선소에 누가 일하러 오겠는가?

지난해 일감이 크게 늘었지만, 장기 불황 시대에 수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불안 요소도 있다. 최근에는 철판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사용자들의 비용 부담도



함께 일하는 이주노동자들과 우호적으로 지내며 단결해야 함께 사용자를 압박하고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늘었다.

결국 정부는 인력은 필요한데 정규직으로 채용하지는 않고, 값싸고 쉽게 쓰다 버릴 수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받을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를 환영하고 우호적으로 지내야 한다. 그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단결해 투쟁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차별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 따윈 그 어디에도 없다.

노동계급의 단결

일각에서는 이주노동자가 들어오면 한국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더 나빠지

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반대한다.

그러나 노동조건 악화는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노동자 착취를 통해 최대 이익을 뽑아내려 하기 때문이다.

일자리와 증감은 경제 상황에 따른 정부와 사용자들의 투자 증감과도 연동돼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도 지난 수년간 한국인 노동자 수만 명이 잘릴 때, 이주노동자들 역시 많이 해고됐다.

지금은 조선업 경기가 좀 나아져 인력 충원이 필요한데, 사용자들은 인건비를 최대한 아끼려 한다. 이럴 때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늘리려 한다면, 우리는 이 노동자들을 내칠 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요구하며 단결을 추

구해야 옳다.

이런 원칙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물론,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느냐는 만만찮은 투쟁에 달려 있을 것이다.

차별은 노동자들이 착취에 대한 분노를 지배계급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돌리게 만든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서로 단결하지 못하게 해서 모두의 조건 개선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런 점에서 금속노조와 조선소 노조들이 모인 '조선업종노조연대'가 "이주노동자 투입을 막아 내겠다"고 밝힌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배척 분위기를 만들어 정부와 사용자들의 이간질을 더 쉽게 만들 뿐이다. 그러면 노동자들의 단결이 약화돼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쟁취하기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들이 차별을 강화하는 마당에,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 등이 울산시와 함께 조선업 노사정 포럼에 참가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도 무망해 보인다. 오히려 대화에 기대다가 단결과 투쟁을 건설할 타이밍만 놓치게 만들 수 있다.

조선소에 있는 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 이주노동자 모두 같은 사용자에게 고용돼 있다. 노동자들은 단결해야만 사용자를 압박하고 노동조건을 함께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 차별에 반대하는 것은 그런 단결을 위해 필수적인 출발점이다.

권준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대의원

▶ 12면에서 이어짐

한국인 이민자들의 피해 바로보기

이번 항쟁에서 줄곧 한국인 이민자들은 분노한 흑인들의 표적이 됐다. 한국인들이 흑인과 중남미계를 상대로 한 밀바닥 소매업에 주로 종사해 왔고, 그러면서 그들과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한인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려던 15살 흑인 소녀를 싸 죽인 두순자 씨 사건이 그 사례다.

이것이 사실이긴 해도 흑인 노동자들은 표적을 잘못 골랐다.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 이민자 역시 백인 지배계급한테 차별당한다. 지배계급이야말로 인종차별을 만

들어 낸 주범이다. 그들은 그러지 않고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빈곤과 인종차별로 생긴 좌절과 분노가 갈 데까지 가고, 이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정치 세력이 없을 때는 가까운 다른 희생자들이 분노의 제물이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점을 잘 아는 미국 지배계급은 오랫동안, 자기들에게 겨누어져야 할 흑인들의 저항을 다른 인종에게 돌려 왔다. 1991년 여름, 뉴욕 크라운하이츠에서 일어난 하시드계 유대인 살인 사건에서도 보듯, 성난

흑인들의 희생양은 주로 유대인들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인 이민자들이 희생양이 됐다. 미국 지배계급은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들은 항쟁이 일어나자마자 그 진원지였던 LA 사우스센트럴가(街)에 한인 상점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한국인이 흑인 시위대에게 총격을 가하는 장면만을 TV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또, 경찰을 흑인 거주민이 1퍼센트도 안 되는 부유층 거주 지역 베벌리힐스

로 철수시켜, 성난 흑인들이 한국인 이민자들을 공격하도록 부추겼다.

미국 지배계급이야말로 한국인 이민자들에게 재앙을 안겨다 준 진짜 '폭도'임이 분명하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한국인이 당했다"고 해서 흑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그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서는 안 될 것이다. 저들의 거짓말을 믿지 말고 당신의 눈을 믿어야 한다! (12면 사진을 보시오) 진정한 적은 형님인 부시이자 아우인 노태우이고 그 둘 다인 자본가 계급이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

고 한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렴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 2021년 2월 27일 개정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workerssolidarity.org/join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10-6491-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online

f 노동자 연대
@ wspaper_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하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채널 바로가기

- 주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 이슈를 10분 안에 명쾌하게! 시사/이슈 토크
- 135개 다양한 쟁점을 다룬 읽시즘 강연 음원
- 현장감 넘치는 노동자 투쟁 취재 영상

새 코너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기후 정의,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 탈성장과 핵발전 등 총 10회에 걸쳐 기후 위기 문제와 운동 내 쟁점을 다룹니다.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예산 증액 회피하는 윤석열의 장애 정책은 “빈 깡통”

4월 19일 윤석열 인수위가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빈 깡통’이라고 비판받아 온 윤석열의 대선 공약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벌이며 요구해 온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장애인 운동 단체는 “예산 없이 권리 없다”고 외치며 지난해 말부터 시위를 벌여 왔다. 정부가 그럴싸한 정책을 내놔어도, 결국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아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경험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들은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는 요구를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했지만, 개선에 필요한 돈을 쓰는 데는 인색했다. 이윤 경쟁과 착취에 기반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지배계급에게 ‘매력적 노동력’이 될 수 없고 장애인 복지는 ‘비생산적 지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윤석열 인수위도 예산 증액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제시한 정책들(돌봄체계 강화, 이동권 보장,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 모델 개발, 문화·체육시설 확대 등)이 얼마나 실행될지 회의적이다.

시설 수용은
장애인들을 사회에서
고립·배제하는 정책이다.
또 장애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나마 개선하겠다는 정책도 껌죄죄하다. 예컨대 이동권 정책에서 ‘시내버스 저상버스 의무 교체’는 이미 지난해 통과된 법에서 규정된 바다.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의 이미 오래 전에 서울시가 약속한 것이다. 장애인 콜택시 확대(법정대수 100퍼센트 달성)는 임기를 마치는 해에나 하겠다는 것이다.

고용 분야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 대책이나,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는 열악한 현실에 대한 개선이 담기지 않았다.

문제적

그 가운데는 문제적인 것도 있다. 윤석열의 장애 정책 중 핵심이라 꼽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다. 그간 정부가 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여러 복지 서비스들의 총액을 산출하고 이를 심사·평가해서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명분으로 유럽 국가들에서 도입됐지만, 정부 지출 삭감과 민간 시장 활성화를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조치였다.

한국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면 장애인이 지급받는 총액이 삭감되거나 수익성 논리가 강화돼 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나라 ‘장애인 지원 정부 예산’은 OECD 평균의 1/3 수준으로, 정말 형편 없다. 그래서 대다수 장애인들이 빈곤하게 살아간다. 장애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의 71퍼센트에 불과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훨씬 열악하다.

진정 필요한 조치는 대부분 민간 시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장애인들의 삶을 개선하려면 국가의 지원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

설에 떠넘겨져 있는 돌봄 시스템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복지 예산 자체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

특히 인수위는 장애인 운동의 요구 중 ‘탈시설 예산’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시설에서 살기를 원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탈시설’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요구이다.

시설은 오랫동안 장애인들의 증오의 대상이었고, 여러 문제 제기과 투쟁 속에서 환경이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시설 수용은 장애인들을 사회에서 고립·배제하는 정책이다. 또, 시설 수용은 장애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충분한 지원(주거 지원, 활동지원 등)을 해야 한다.

성지현

▶ 16면에서 이어짐

기업 철밥통” 이간질로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부터 임금을 깎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각개격파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설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연대를 구축할 정치

아쉽게도 그동안 노동운동 전반에 연대 정신보다 부문주의가 커져 왔다. 일부 정규직 노조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반대하거나, 심지어 비정규직

투쟁을 방해하는 일도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두드러진 사례였을 뿐이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를 악화시켰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노조 지도자들 사이에 노(사)정 협조주의 노선이 강화됐는데, 이는 투쟁을 보편화하고 연대를 넓히는 데 걸림돌이 됐다. 노동자들은 개별 작업장 수준에서, 부문별로 크고 작은 투쟁에 나섰지만, 적잖은 경우 상급단체의 방치와 연대

회피로 고립되곤 했다.

정의당 등은 노동자들 사이에 임금, 기금 등을 나누는 사회연대전략을 부문주의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다. 비정규직을 위하고 계급 내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사회연대전략은 연대 투쟁을 통한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정규직이 사측에 임금이 나 조건을 양보하자는 것이다. 사측에 양보한다고 한들 비정규직 처우가 좋아질 리 없을 뿐 아니라, 이런 양보는

노동자들 사이에 단결을 고취하기보다 도리어 반목을 조장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노조 지도자들은 “현장 정서”를 핑계로, 때로는 “내 코가 석자”라는 이유로 부문주의를 정당화해 온 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우파 정부의 이간질과 각개격파에 무기력하기 쉽다. 협소한 노동조합주의가 아니라 작업장과 부문을 넘어 계급 전체의 관점에 서야 한다.

박설



윤석열의 노동 '개혁'은 임금 삭감, 규제 완화 등 노동조건 후퇴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거듭 밝혀 왔다. 이를 위해 "기업 활동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한다. 윤석열 인수위가 최근 발표한 국정목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와 문재인 정부도 혁신 성장과 규제 완화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저조한 경제 성장이 지속됐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저질 일자리만 늘고 양극화가 심해졌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4중의 위기, 즉 경제의 장기 침체, 팬데믹, 국제 질서의 불안정, 기후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국 경제의 성장을 하락,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은 경제 회복 전망을 더 어둡게 만들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을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했다. "물가, 유가, 금리 3고(高)에 곱소리 나는 민생"(<시사저널>)에 대한 서민층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수익성을 만회해 주려고 노동자들을 최대한 쥐어짜는 '노동개혁'을 내세운다.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임금을 삭감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노동 규제 허물기

인수위가 밝힌 세부 내용들은 이렇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주되게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



윤석열은 처음부터 한방에 공격을 쏟아붓기 어려운 처지다. 각개격파에 맞선 단결이 중요하다

대,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을 보고했다.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사용자들은 총량 한도 내에서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일이 몰릴 때 초과수당 없이 장시간 근무(심지어 이를 연속근무도)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연공급제(호봉제)를 허물고 직무성과급제로 개편하면, 노동자들의 임금이 개별화하고 내부 경쟁이 강화되기 쉽다. 반면, 직무와 성과 측정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들의 지위는 더 강화된다. 이는 노동자들의 임금 전반을 하락시키고 단결을 약화시킬 것이다.

인수위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대표적인 '족쇄 규제'로 규정했다. 법 위반 기업의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징역형을 제하고 벌금형 위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하겠다는 방안도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을 대폭 줄이고 공공기관 정원관리(충원 제한)를 추진하겠다는거나, 노동 쟁의에 대한 법 적용을 엄격히 하겠다는 정책 방안들도 논의되고 있다.

물론, 윤석열은 임기 초부터 대대적

인 공격을 감행할 만큼 자신만만한 상황이 결코 못 된다. <조선일보> 주필은 "역대 최악의 새 정부 출범"이라는 말로 윤석열의 처지를 묘사했다.

가까스로 당선한 대통령, 절반도 안 되는 새 정부 초기 지지율, 당선 직후부터 이어진 신구 권력의 진흙탕 싸움 등등. 이렇게 가다가는 집권 초기 촛불시위로 지지율이 7퍼센트 바닥까지 떨어졌던 이명박, 집권 말기 심각한 내분을 겪다 퇴진 운동에 직면해 임기도 못 채우고 탄핵당한 박근혜의 전철을 밟을까 봐 우려하는 것이다. 취임하기도 전부터 레임덕 격정에, '제발 꼴통스럽게 하지는 말라'는 주문이 우파 내부에서 나온다.

야금야금

게다가 노동계급의 의식은 후퇴하지 않았고 개혁 염원도 여전하다. 여러 정치적 위기와 부진을 겪었지만, 노동조합 조직도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이후 더 성장해 여전히 건재하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이 서로 단결하지 못하도록 이간질하고 부문별로 각개격파 함으로써, 노동계급의 뒝을 줄이고 조건을 끌어내리려 한다. 선택근로제 확대를 한 사업장 안에서 부서별로 합의 시행할 수 있게 하겠다거나,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겠다는 방안들이 뜻하는 바다.

윤석열 인수위는 사무직·고임금 노동자들을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안도 내놔는데, 이는 "대

▶ 15면으로 이어짐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앞날, 어떨까?

5월 5일(목) 오후 8시 발제 김문성 <노동자연대> 기자

턱걸이 당선한 윤석열이 5월 10일 취임합니다. 5년 만에 돌아온 우파 정부죠. 그런 만큼 각료 인선부터 그 색채를 분명히 하며 각종 개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물가 폭등부터 지정학적 불안정까지 윤석열을 둘러싼 조건은 만만치 않습니다. '개팔' 현상이 보여 준 건재한 개혁 염원도 그중 하나죠. 윤석열 정부의 모순을 살피고 앞날을 내다보면서, 이 정부하에서 어떻게 투쟁해야 할지도 살펴보려 합니다.

참가신청 bit.ly/0505-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